

다산포럼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2017년 상반기 은행산업의 영업 실적을 보면 당기순이익이 8조 원을 넘고 있다. 금융산업이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것은 외환 위기 이후 금융 정책이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모피아(옛 재무부 관리를 마피아에 빗댄 용어)들은 금융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은행 간 합병으로 금융산업 독과점 체제를 만들었다. 그 결과 금융산업의 수익성은 올라갔지만, 한국 금융의 경쟁력이 강화되거나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는 않았다. 금융회사는 대형화되었지만 국제 시장에 진출해 경쟁하기보다 국내 금융시장의 독과점 체제에 안주해 전당포식 담보대출로 손쉽게 고수익을 내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BIS비율 등 재무건전성이 강조되면서 은행들은 리스크가 큰 기업금융보다 리스크가 낮은 소매금융에 집중하였고,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부채가 1400조

‘포용적 금융’으로 금융 개혁을

원에 이를 정도로 증가해 소비 침체와 부채 위기 가능성 등도 심화되었다. 금융 정책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금융의 공공성은 크게 약화되었다. 외환 위기 전만 해도 은행은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현재 금융회사는 수수료와 금리로 고객을 차별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수익성에 도움이 안 되는 고객을 암암리에 밀어내는 경영 전략도 거리낌없이 실행한다.

수익성 추구 은행도 사람 차별

영세 자영업자, 장업자, 청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는 돈이 절실할 필요해도 담보가 없으면 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돈이 없는 사람은 창업이나 사업 확장의 기회가 적고, 고금리 대부업체의 약탈적 금융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이에 반해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 공무원, 대기업·대기업 직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고소득층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 쉽다. 좋은 직장과 자산 보유 계층에선 대출 기회가 훨씬 많고, 그렇지 못한 저소득 계층에게는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금융 배제’(financial exclusion) 현상이 심화되고, 금융 격차가 부동산 투기와 결합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금융산업의 독과점체제는 산업 발전도 저해하고 있다. 제도 금융권은 담보 중심

의 금융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기에 굳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와 기술평가 능력을 키우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담보 없는 중소기업이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금융 정책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신용과 담보 능력 격차는 개인의 책임이고 그에 따른 금융 격차는 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금융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모피아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고수의 독과점 금융산업 체제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금융 감독을 하던 고위 공무원은 퇴임 후 관련 협회, 연구기관, 대학에서 몇 년간의 신분 세탁을 거친 후 금융회사 고위 임원으로 다시 취임하여 상위 0.1%의 상류사회에 진입하는 정형화된 공식이 작동하고 있다.

양극화 심화시키는 ‘금융 격차’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금융 배제, 금융 격차 문제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2010년 부산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에 대한 세계은행 팀의 주제 발표가 있었고, 2012년 멕시코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도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 실현 방안을 의제로 논의하였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의 금융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규 진입 정책을 통해 금융산업 독과점 패해부터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독일의 저축은행과 같은 지방 금융기관을 많이 육성해 지역의 중소기업과 밀착된 관계금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저신용 서민들이 겪는 금융 격차를 완화하려면 각종 금융 협동조합의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 거버넌스 구조 또한 개혁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이 국민연금 가입자 손실을 초래한 잘못된 결정이라면 일제히 찬성 의견을 낸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투자 고객에게 손실을 끼친 것으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특검과 법원이 국민연금 관계자를 단죄했는데 반해, 금융감독기구가 이에 대해 정적묵고 있는 것은 현재의 금융감독 정치가 그만큼 비정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이해 상충 문제로 원래 분리되어 있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업무를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원회로 통합한 것은 감독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악화시킨 잘못된 정책이므로 개혁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금융 배제’를 일삼는 금융회사와 ‘금융 포용’을 추구하는 금융회사를 구분해 정책적으로 차별 대응하는 인센티브 체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 정책이 금융 격차를 완화하고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정춘 특·특



석정아
조선대 법학과 4학년

고등학교 때 나는 입시를 위한 수능도 서보다 인문학과 더 가까웠다. 공부에는 영 관심이 없고 공리주의가 주는 문제 같은 철학적인 논쟁과 소설을 통한 간접 경험들로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좋았다. 거리의 사람들을 보며, 비록 그럴듯한 장래 희망은 없어도 화색 도시 안에서 색이 있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스무 살이 되었다. 그와 동시에 어른의 신분이 되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자기 의지대로 선택해본 적 없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선택과 그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갖게 된 것이다. 어른의 삶에 대한 고민을 미처 할 수도 없이 대학생으로의 하루가 벅했다. 세상에 그렇게 놓 수 있는 방법이 많고, 노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를 찾기 위한 시간

시간이 지나면서 노는 것도 더 이상 재물이 없었다. 별다른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낼 수도 있게 되었다.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하루를 살고, 남을 따라서 영어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준비했다. 언제나 바라던 빛나는 시간은 한참 거리가 멀어 있었다. 어느새 나는 그렇게 되었다. 그런 하루가 반복되면서도 누군가, 무엇인가가 내 하루를 변화시켜줄 기대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드라마틱한 계기가 내 삶에 있었으면 했다. 그러나 내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이 두려웠고 드라마는 드라마, 영화는 영화였다. 2학년 겨울방학 때, 두려움을 버리고 결국 휴학계를 내기로 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반대했으나 내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에 변화가 없었다. 맨 첫 번째로 자취를 선택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완강한 반대 속에서 지원 없이 자취를 시작하기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했다. 내성적이진 않았으나 굳이 나서지도 않았던 나는 단기간에 돈을 벌기 위해 대형마트 판촉을 선택했다. 처음엔 못내 어색하고 부끄러웠으나 동년배들의 도움이 있었고, 생계를 위한 일이었다 때문에 적응해야 했다. 처음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전기료를 격정하고, 보안에 신경을 썼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꽤 많은 것

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걸 알았다. 두 번째로는 책을 다시 가까이했다. 생계를 위한 삶에서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의 사치를 부려야 했다. 책을 빌리던 버스비만 들고, 한 권을 사면 몇 시간, 며칠은 즐길 수 있었으니 최고의 선택이었다. 한동안 멀어졌던 책을 통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무엇인가에 관해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무척 오랜만이었다. 세 번째로는 글을 썼다. 내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나를 알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는데, 일상 속에서 그런 시간을 갖고 나를 돌아보기란 힘든 일이었다. 글을 쓰는 것은 시간을 갖고 어떠한 생각을 할 기회를 만드는 일이었다. 정해진 주제가 있기도 했고, 마땅한 주제 없이 써내려가기도 했다.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상관없었다. 그렇게 6개월을 보내면서 나를 조금씩 알게 되고, 무엇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 알게 되면서 자취 생활을 정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휴학기간 동안은 여행을 선택했다.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으나 그 문구들이 와 닿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몸으로 세

로운 것에 부딪쳐 보기로 했다. 몇 개월 필요한 경비를 벌어서 강원도, 경상도 등 다른 지역을 다녔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고, 저마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책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 것과는 달리 생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가왔다. 여행은 높이 성장하기보다 넓어진다고 했다가,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생각이 들었다. 1년으로 계획했던 휴학 기간은 끝났으나 북학 대신 1년 더 휴학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부에 한 번도 치열하게 달려들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호승심은 공부를 시작하는 계기는 될 수 있었으나 지속시키는 동기는 되지 못했다. 하루에 최소 8시간 집중하는 공부를 계속하기에는 절실함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하는 공부는 그저 막 그만큼의 성적 밖에 내지 못했고 목표를 성취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모두 2년, 다른 친구들보다 2년이 늦어진 채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남자처럼 군대를 다녀온 것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스펙을 쌓은 것도,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것도 아니지만 아직 조금만 생각이 없다. 나는 끊임없이 나만의 빛을 찾아서 나만의 속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

기 고



배미경
호남대 초빙교수

오늘로부터 정확히 178일 후면 평창에서 올림픽이 개막한다. 120년이 넘는 근대 올림픽 역사에서 ‘평화 올림픽’이 강조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지구촌의 화합과 평화는 올림픽의 핵심 주제다. 최순실 사태로 상처가 큰 평창 올림픽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안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2015광주유니버시아드에서 그토록 실현하고자 했던 남북단일팀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광주유니버시아드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UNOSDP(유엔스포츠평화개발사무국) 전 장관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에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안한 것을 듣고는 세상 많이 변했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광주유니버

문재인 정부와 평화올림픽

시아드 상황과 180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광주유니버시아드조직위가 설립된 2010년 박근혜 정부에서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 국제적 도발이 잇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단일팀을 실현하겠다고 백방으로 뛰면서 UN까지 찾아갔던 생각이 난다. 시간을 거슬러 2009년, 남북단일팀을 성사시켜 세계평화에 길이 남을 유산을 남기겠다는 포부로 시작한 광주유니버시아드의 남북단일팀 프로젝트. 지금 안보상황이 7년 전보다 나아진 것도 없다. 그런데 그때는 남북단일팀이 이뤄질 듯 이뤄지지 않는 신기루였다. 광주는 대회를 개막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북한의 참가를 기다리면서 개막식장에 그들을 위한 자리를 남겨 놓았다. 가장 아쉬움이 큰 프로젝트였다. 지금은 대통령이 나서서 단일팀 구성을 제안하는 등 스포츠 교류의 문이 활짝 열렸다. 북한이 미국령 괌을 지목해 도발을 경고하고 미국도 선제타격을 위협하는 등 안보위기 상황에서 올림픽 단일팀을 논하는 것이 한기해 보일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갈등 상황이기 더욱 평화대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이들이 평화의 달성과 유지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그중 이마누엘 칸트의 영구 평화가론이 가장 주목받는다. 칸트가 말하는 평

화의 의미는 갈등이 없는 상태다. 어떻게 보면 영구 평화론은 인류가 추구하는 유토피아적 세계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인류는 늘 갈등과 분열, 전쟁과 분단, 차별의 역사였다. 그러다 보니 평화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되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88서울올림픽 개최 이전에 열린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LA올림픽은 세계적인 전쟁과 갈등으로 반쪽짜리 올림픽이었다.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서방 60여개국이 불참한 가운데 치러졌고, 84년 LA 올림픽 역시 소련과 동유럽 18개국이 불참했다. 때문에 88년 서울올림픽은 정치적 대결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올림픽이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진다면 세계평화 정착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후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스포츠대회에 ‘평화’와 ‘화합’의 가치가 중심이 되지 않은 대회가 없다.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와 화합은 중요한 가치인데 틀림없다. 하지만, 그 실현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도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만 한다. 한 번의 이벤트 또는 상징적인 일로 끝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만 한다. 왜 남북단일팀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분명한 명분과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한다. 단일팀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올림픽만을 보고 인생을 걸고 달려온 선수들의 대회 출전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2008 베이징 올림픽 때도 코앞까지 갔던 남북단일팀이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배경에는 선수들의 이해관계가 컸다고 알려져 있다. 둘째 단일팀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동시 입장과 달리 선수 간의 호흡을 맞춰야하는 공동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공동훈련의 방법과 시기 조율도 현실적 문제다. 셋째 올림픽은 국가 대항전으로 치러져서 우승국의 깃발이 게양되고 국가가 울려 퍼진다. 시상식에 게양할 깃발, 울려 퍼질 국가를 무엇으로 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국가와 국가는 국가 정체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헌법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스포츠대회를 주관하는 국제연맹의 규정에 대한 사전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책을 예비하고 창구를 열어 놓아야한다. 평화대회는 정치적 산물이다. 그렇다고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말아야만 한다. 진정성이 결여된 말잔치나 인사기가 아니길 바란다.

社說

독립운동 유족 대우받는 제대로 된 세상을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 이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이 말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마치 속담처럼 굳어졌으니 매우 슬픈 일이다. 광복 72주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벗어나지 72년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되찾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독립운동가의 유족들은 대부분 근근이 살아가지고 있는데 비해 미국·친일 활동을 한 친일파 후손들은 여전히 부를 누리고 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그런데 손해 봐, 아주 어렵게 살아. 그걸 보고 누가 목숨을 바치려고 하겠어요?” 어느 독립운동가 후손의 탄식이다. “말로 하는 건 밥 한 그릇보다 못하다고 봐요. 보존 가족이 밥 못 먹고 학교 교육 못 받는 상황은 안 만들어야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은 나라를 찾기 위해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다. 하지만 해방이 된 후에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남한에서는 다시 친일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오히려 이종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니 독립운동 하면 거지가 되고 친일하면 갑부가 된다는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 되고 만 것이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어제 독립 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독립 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기념사에서도 ‘살이 찢기고 손발톱이 뻗혀 나가면서도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조국을 버리지 않았던’ 애국지사들을 기리며 “그 후손들이 겪고 있는 가난의 서러움, 교육받지 못한 억울함, 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두고 나라도 눈물 흘릴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들을 기억하고 기리고 그 유족들을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의무요 그런 세상이어야만 제대로 된 세상이라 할 것이다.

5·18 왜곡하면 이젠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선동한 폭동으로 왜곡해 온 세력들에게 최초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 5·18을 반란이나 폭력 사태로 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이들에게 형사처벌과 함께 물질적 배상까지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5월 관련 단체 5곳, 천주교 사제와 5·18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 씨 등 5·18 당사자 아홉 명이 국유 보수 인사 지만원(75) 씨와 인터넷 보수 매체 뉴스타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 씨 등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 북한군으로 지목한 당사자 3명에게 1000만 원씩을 배상하는 등 당사자와 관련 단체에 총 8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뉴스타운이 허위 사실을 배

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할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20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지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유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5·18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이나 벌금형 정도가 전부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5·18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앞으로 있을 뉴스타운과 지 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3건)과 손해배상(1건) 소송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게 한다. 아무쪼록 이번 판결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흑색선전 세력이 더 이상 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無 等 鼓

“당한 것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일본 사람들이 정신대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발뺌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혀 증언하게 됐습니다.” 1991년 8월 14일, 한 할머니가 큰 용기를 내 50여 년 전 일별 제국주의의 잔학성을 고백했다. 당시 67세이던 김학순 할머니는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열일곱 살이었던 1939년 봄에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 당했던 치욕스런 만행을 증언한 것이다. 김 할머니는 조선 상인의 도움으로 3개월 만에 극적으로 탈출했지만 많은 여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질 못했다. 김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입을 열었고, 자칫 묻힐 뻔했던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당시 조선 여성뿐만 아니라 중국·대만·필리핀·네덜란드인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태평양전쟁 때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사실을 부인하고 공식 사과마저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군사대국화와 함께 우경화로 치닫고 있다. 그러는 사이 김 할머니(1924~1997)를

비롯해 많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현재 국내에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불과 37명이다. 지난 14일은 ‘세계 위안부의 날’이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지난 2012년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열린 회의에서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위안부 피해 사실을 대중 앞에 증언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했다. 이날 광주 5개 자치구에도 소녀상 제막식이 열렸다. 광복절을 맞아 광주 시청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찾았다. 타 지역 소녀상이 의자에 앉았는 반면 광주 소녀상은 나비를 날리는 동작을 하고 있다. 소녀상 바닥에는 이병창 시인의 ‘나비의 소원’이 새겨져 있다. “이제는 일어서라/ 벌레 같은 굴종의 과거를 떨치라/ 나 그대의 손잡고 걸어가리라/ 사람이 사람다운 수 있고/ 세상을 향해/ 신명 나는 날갯짓을 하리라...”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지 72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이끌어 내는 문제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송기웅 예방부장song@

위안부 기림일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18)	경 영 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계 회 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안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